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토론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책 발전 방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함께
성평등을 일상으로!"



2019. 11. 28(목) 14:30

장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2층 컨벤션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관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목 차

05 토론회 시간계획(안)

07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영암·무안·신안국회의원 서 삼 석
더불어민주당 전의여성위원장 국회의원 백 혜 련

11 전남여성가족의제2020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안 경 주

27 여성이여, 정치적 주체가 되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의 경

41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제도방안

전라남도의회의원 윤 명 의

45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실사구시의 맞춤형 정책과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구례군의회의원 이 승 옥

53 문을 열고 나서라 - 우리는 여성이다 -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조 명 미

59 전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순천대 명예교수, 사회학 교수 박 옥 임

67 블루 이코노미 시대, 경제주체로서 전남 여성의 역할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 영 미

토론회 시간계획 (안)

구분	시 간	소요	내 용	세 부 사 항
1 부 개 회 식	14:30~15:00	30'	등 록	·참석자 등록
	15:00~15:10	10'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 장은영 여성국장
	15:10~15:15	5'	주요참석인사 소개 및 개회사	·박현숙 도당여성위원장
	15:15~15:20	5'	격 려 사	·서삼석 도당위원장
	15:20~15:25	5'	축 사 (영상)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2 부 토 론 회	15:25~15:30	5'	기념촬영(포퍼먼스) 및 진행안내	·좌장 : 김은경 민주당리더십센터소장
	15:30~15:55	25'	주제발표 1	·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 전남 여성가족의제 2020
	15:55~16:20	25'	주제발표 2	· 박익경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성이여 정치적 주체가 되자!
	16:20~17:00	40'	지정토론	① 윤명희 전남도의회 의원 - 여성의 경제활동과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방안 ② 이승옥 구례군의회 의원 - 여성의 삶 향상, 실사구시의 맞춤형 정책과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③ 조영미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여성이여 문을 열고 나서자 ! ④ 박옥임 순천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전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⑤ 김영미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블루이코노미 시대, 경제 주체로서의 전남여성의 역할
	17:00~17:20	20'	종합토론	·질의 및 답변
	17:20		마무리 발언 및 폐회	·좌장 및 사회자

인 사 말



존경하는 박현숙 전남도당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 당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서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 총선을 앞두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역의 여성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의 짧은 의정 활동기간이었지만 농어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없이는 우리 농어촌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꾸준히 농어촌 여성 문제에 대해 관련법 개정과 정책 토론회 그리고 정부내 전담부서를 확대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남을 비롯한 4개 시·도에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설립하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체결(2019.3),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 추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2018. 4)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총선은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의 표출이었던 촛불여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정권 재창출,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도적인 총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전남도당이 앞장서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 여성 당원의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 당원 여러분께서 왕성한 활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뤄내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영암·무안·신안국회의원 서삼석

인사말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백혜련입니다.

먼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현숙 전라남도당 여성위원장님과 여성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들은 세상의 차별과 부당함을 알리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왔습니다. 평등 사회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되었으며, 이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 평등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여성들이 더욱 힘을 모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 그러한 점에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진짜 삶을 돌아보고, 평범한 여성들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를 특히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있는 만큼, 여성정책에 대한 더 폭넓은 반영을 위해 오늘 다양한 비전이 제시되고 의견이 모아지길 바랍니다.

여성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여권 신장의 사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층 발전된 여성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백혜련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의 삶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전남여성가족의제2020

안 경 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안경주 원장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의제 2020

본 의제는 「전남여성가족재단 2019 찾아가는 22개 시군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여성일자리 · 경제활동

경력단절여성

여성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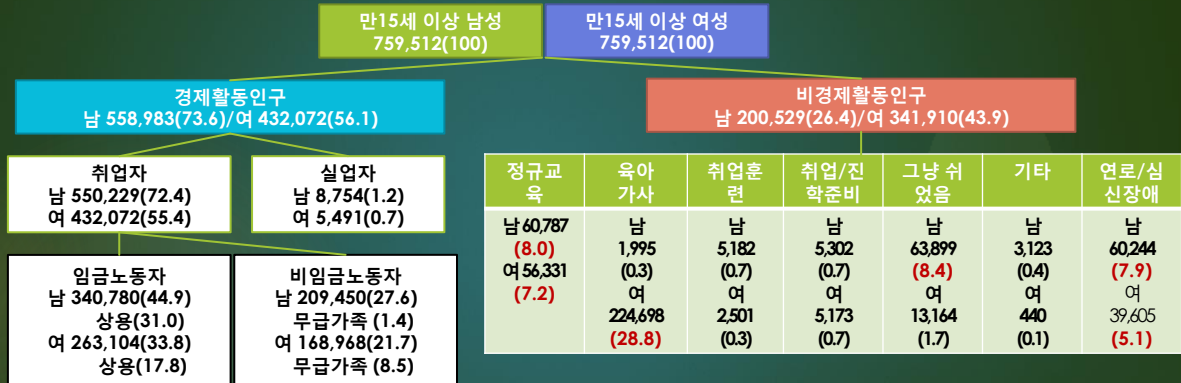
성별임금격차
해소

WORK and LIFE
Balance

- ▶ 시·군별 경력단절여성 지원 조례, 실태조사
- ▶ 40대 고학력 여성 경단예방
- ▶ 경력단절여성 지원 수준 상향 조정
- ▶ 여성농업인 농민수당 지급
-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 ▶ 일·생활균형 사회분위기 조성
- ▶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전남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구조와 고용상 성별 격차

성별 이원적 일-생활 분담 구조



- 전남 남성 : 31.0% 상용직, 27.6% 비임금노동자, 26.4% 비경제활동인구
- 전남 여성 : 43.9% 비경제활동인구, 21.7% 비임금노동자, 17.8% 상용직
- 비경제활동인구 : 남성 전통적 니트(그냥 쉬 8.4%), 여성 육아·가사(28.8%)

성별임금격차와 여성의 근로빈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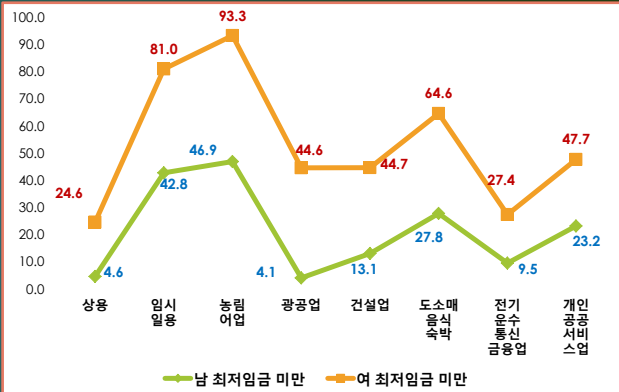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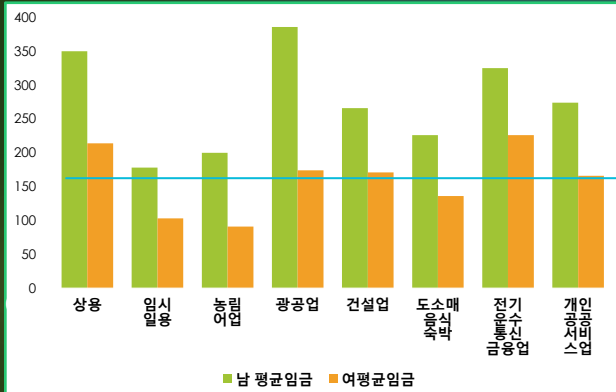
<2018년 전라남도 남녀 취업자의 월평균임금>

		남성		여성		임금성비 ¹⁾
		월평균임금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	월평균임금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	
전체	전국	3,384,790원	13.3	1,986,346원	38.7	58.7
	전라남도	2,966,336원	16.4	1,617,675원	51.3	54.5
종사 지위	상용직	3,498,220원	4.6	2,144,920원	24.6	61.3
	임시일용직	1,782,683원	42.8	1,031,614원	81.0	57.9
업종	농림어업	1,999,842원	46.9	914,513원	93.3	45.7
	광공업	3,855,413원	4.1	1,743,185원	44.6	45.2
	건설업	2,662,775원	13.1	1,706,269원	44.7	64.1
	도소매·음식숙박업	2,264,169원	27.8	1,359,616원	64.6	60.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246,830원	9.5	2,263,582원	27.4	6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743,990원	23.2	1,657,750원	47.7	60.4

자료 : 통계청(2019), 「지역별고용조사」 2018 하반기조사 원자료 분석

주1) : 남성임금 기준 여성임금의 비 = 여성임금/남성임금*100

성별임금격차와 여성의 근로빈곤화



- 2018년 하반기 기준, 최저임금 미만 남성 16.4%, 여성 51.3%
- 남녀 모두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큼. 임시일용, 농림어업 여성 대부분은 최저임금 미만
- 여성이 평균적으로 월 2백만원 벌이 할만한 업종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뿐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수준의 시 군별 차이, 대응전략

- 시군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수준의 차이 → 여성 경찰참가율, 임금수준 결정 요인이 상이
- 지역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의 집중과 다각화 전략 필요

행정구역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임금 성비	행정구역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임금 성비
목포시	71.54	65.41	장흥군	86.02	57.18
여수시	63.22	46.99	강진군	83.87	61.70
순천시	70.28	55.42	해남군	89.71	67.60
나주시	79.21	65.26	영암군	69.93	57.63
광양시	62.56	44.92	무안군	84.37	64.12
담양군	91.47	67.92	함평군	88.17	63.81
곡성군	80.04	66.33	영광군	78.09	59.76
구례군	89.73	59.59	장성군	81.17	70.28
고흥군	88.22	65.75	완도군	86.92	57.77
보성군	85.17	58.67	진도군	88.84	60.19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수준의 시군별 차이, 대응전략

도시 1인 생계부양 지역 (여수, 순천, 광양)

- 고학력 여성 거주비를 높으나, 3,40대 여성 취업률 54.6%로 가장 낮음
- 성별 임금격차(48.3%), 성별 정규직 비율 격차 큼
- 평균임금은 4유형 중 가장 높음(297.6만원)

고학력 경단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비정규직 생활임금제 시행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농업 발달 지역 (구례,고흥,담양,강진,진도,장흥,신안)

- 농가인구비율 31.3%로 가장 높음
- 20대 여성취업률 (69.6%), 3,40대 기혼여성취업률(75.2%) 높음
- 성별 임금격차 크지 않고(58.2%) 평균임금도 중위수준(232.3만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도농복합, 1.5인 생계부양 지역 (화순,영암,나주,영광,무안,목포)

- 3·40대 기혼여성취업률 (63.2%) 중위수준
- 성별 임금격차 적고(60.1%) 평균임금도 높은 편(237.6만원)
- 20대 여성취업률(48.8%) 낮음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전형적 농업 중심 지역 (곡성,보성,완도,장성,해남,함평)

- 농가인구비율 28.5%로 높음
- 3,40대 기혼여성취업률(76.7%) 가장 높음
- 평균임금 208.9만원으로 가장 낮음
- 20대 여성취업률 48.3%로 가장 낮음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전남여성일자리 전략지도 구축

전략지도 개발과정

전남 22개
시군별
일자리 주요정책
(공약)

전남 22개
시군별
일자리
목표공시제 &
연간계획

전남지역
연구보고서
발간물
[중장기 일자리계획
수립]



전남 22개 시군별
여성일자리
유망분야 도출 (3~4개)

전남 여성일자리 유망분야 도출 및 전략지도 개발

[여성일자리 전략지도]

시·군별 여성일자리 관련 주요산업



· 시군별 지역특화 및 주력산업으로 여성진출 지원방안 마련

- 시·군별 지역특화 주력산업으로 여성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제도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여성일자리 전략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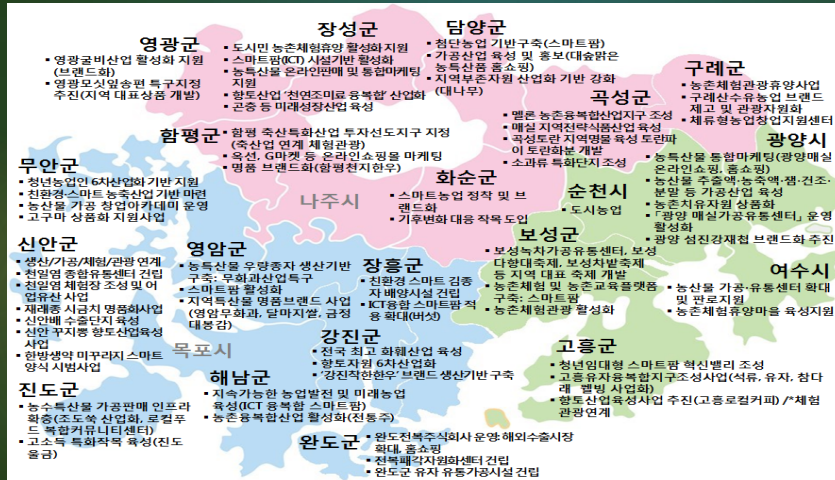
드론 “블루 트랜스포트”



· 농업용 드론(조종사 육성) 분야 집중 → 촬영·편집(행사/관광/레저 등), 감시·관측(자연/산업 등) 드론 활용분야로 여성진출 확대

[여성일자리 전략지도]

농수산물 6차 산업화 → “블루 농수산물”



· 지역특산물 생산·가공 분야 집중 → 유통·판매·마케팅·관광 서비스 분야 여성인력 진출 확대

[여성일자리 전략지도]

농어촌마을 연계 체험/체류 관광 분야 → “블루 투어”



· 지역의 천연자원·역사문화자원 중심 관광지 개발 → 농어촌 유휴자원 활용한 체험·힐링·치유·쉽 관광지 개발로 여성창업 및 관광분야 진출 지원 확대

[여성일자리 전략지도]

신성장 분야 여성인력육성 장기플랜 분야



- 지역 특화산업 연계 전문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필요
- 전남 지역산업 맞춤형, 신성장 분야에 대응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개발·운영
- 여성집중직종 교육(보건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사무원) → 전문기술·교부가가치 분야·장기심화과정 등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시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여성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 군 조례 제, 개정

전라남도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가족관련 조례(법령) 여부(출처: 자체법규정보시스템(ellis.go.kr))

행정 구역	여성평등 기본조례	성별역량(분석) 평가조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여성·아동 지역연대 조례	아동·여성 보호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그 외 성평등 관련 조례
목포시	○	○	○		목포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여성평등조례 내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수시	○	○	○(농어업인)	○	○		○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순천시	○	○	○		순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여성평등조례 내	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여성장애인·홀산지원금 지급 조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주시	○	○	○(농어업인)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	나주시 여성농어업인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나주시 기업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양시	○	○	○(농어업인)		광양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	○	광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담양군	○	○	○(농어업인)	○	담양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X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곡성군	○	○	○			○	○	X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구례군	○	○	○(농어업인)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	여성평등조례 내	구례군 여성문화회관 운영·관리 조례
고흥군	○	○	○		○		○	X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보성군	○	○	○(농어업인)		○		○	X	보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완주군	○	○	○(농어업인)			○	○	○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장흥군	○	○	○(농어업인)		장흥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평등조례 내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진군	○	○	○(농어업인)			○	○	여성평등조례 내	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	○	○(농어업인)		○		○	○	
영암군	○	○	○(농어업인)		○		○	○	
무안군	○	○	○(농어업인)		○		○	○	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함평군	○	○	○		○		○	여성평등조례 내	
영광군	○	○	○(농어업인)			○	○	○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장성군	○	○	○			○	○	여성평등조례 내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도군	○	○	○		완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평등조례 내	완도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도군	○	○	○(농어업인)		○		○	여성평등조례 내	진도군 여성복지 지원 조례
신안군	○	○	○(농어업인)			○	○	X	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가정폭력 · 성폭력 대응

- ▶ 성폭력 2차 피해 근절
- ▶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위한 쉬운 성평등 교육 병행
- ▶ 가족단위 폭력예방교육 설치
- ▶ 폭력예방교육에 성교육 포함
- ▶ 상담센터 종사자들의 여성학 소모임 운영 지원
- ▶ 시·군 상담소 상담장소 확보 지원
- ▶ 폭력피해여성 동반아동 지원 조례

전남 가정폭력 발생 및 대응 역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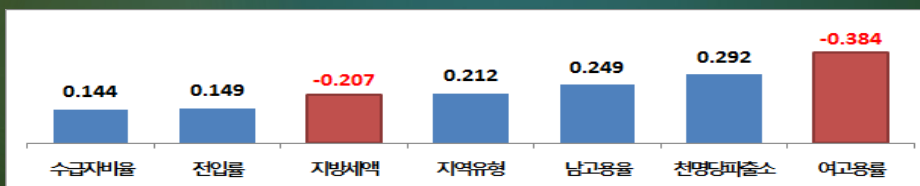
- 가장 은폐되는 범죄, 가정폭력 : 낮은 신고율, 낮은 검거율, 낮은 처벌율

구분	상담건수	신고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2016	17,800	7,498	1,602	21.4%
2017	14,694	8,404	1,394	16.6%
2018	20,207	7,975	1,556	19.5%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 미비, 8개 시군
- 2018년 기준 가정폭력상담소(10개소) 1개소당 수비여성인구 93,997명, 수비면적 1,234km²(>전남 시군 2개 이상 합한 면적)
- 2018년 기준, 297개 읍면동 중 관할파출소 없는 지역 18개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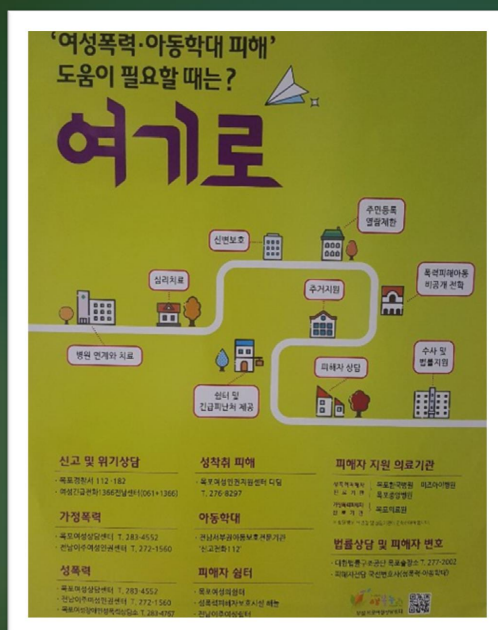
전남 가정폭력 발생률 현황 및 공간적 특징

- 2018.7.17~2019.7.16 가정폭력 112신고통계, GIS 기반 공간분석
- 가정폭력발생률 인구1천명당 4.12건
- 다발시기 : 7,8,9월 → 전남 독자적 가정폭력 추방주간 고려 필요
- 다발 시간대 : 저녁 시간대(오후 6시~자정) → 이웃/마을 단위 예방·감시체제 구축
- 고발생 위험지역(Hot Spot) : 전남 동부, 서부에 집중
- 가정폭력발생 영향요인 중 여성고용률 가장 결정적



3. 전남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여성 고용정책 강화
- 가정폭력 유관기관 전남 합동 대책 마련
- 전남 가정폭력 추방주간 (발생 최빈 시기) 별도 추진
- 가정폭력 상담소 신규 및 추가 설치, 현장 상담사 증원
- 읍·면·동 단위의 가정폭력 근절 지역 추진단 구성운영
- 신고다발지역 집중 대책 마련
 - ✓ 해당 읍·면·동 파출소 가정폭력 전담경찰 배치
 - ✓ 유관기관 합동 집중관리(홍보, 교육, 순찰, 신고가정 재발방지 모니터링 등)
 - ✓ 노동강도 높은 남성노동자들의 인간존엄 회복 프로젝트 : 가족친화, 문화여가



[*목포시 포스터]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지원구조 필요
 읍·면·동 단위의 접근성을 높인
 촘촘한 지원체계구축

여성의 대표성 강화



- ▶ 여성활동가 후속세대 양성
- ▶ 여성리더, 활동가 정책개입 역량 강화
- ▶ 주민예산 참여제 실시, 관련 교육
- ▶ 시·군 의회 여성 진출 확대 방안
- ▶ 시·군 여성 커뮤니티 공간 관련 조례
- ▶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 지속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 ▶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보건위생 지원, 관리
- ▶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거소불명에 대한 대응책 마련
- ▶ 지역민들의 다문화가족 편견, 차별 해소
- ▶ 농촌여성과 다문화여성 멘토링 사업
- ▶ 이주여성 학력 인증에 필요한 검정 고시반 운영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808081056o>

가족 및 돌봄 영역

- ▶ 평등 부부경제 운동, 캠페인
- ▶ 민주적 가족관계를 위한 평등 교육
- ▶ 성평등 명절 캠페인
- ▶ 부모교실
- ▶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
-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가족민주주의 교육운동전개

‘함께돌봄’ 플랫폼 구축

성평등 정책 추진

- ▶ 청년여성 정책 마련
- ▶ 남성 참여 정책 및 사업 개발
- ▶ 여성친화도시 성과 분석
- ▶ 공무원-성인지 예산 교육 강화

성평등 교육

전남여성 정책대학

- ▶ 남성 대상 성평등 교육
- ▶ 이장단-부녀회장 교육
- ▶ 쉬운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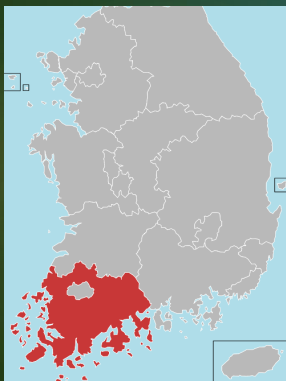
- 공무원
- 의원(도, 시, 군)
- 전남여성가족재단
- 학계, 언론인, 지식인
-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기관

Gender-Governance의 기초작업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가 참여하는가?

성평등 전남실현=전남여성가족 행복시대 Gender Mainstreaming

전라남도 5개 시, 17개 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Gender Governance



여성이어, 정치적 주체가 되자

박 의 경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성이어, 정치적 주체가 되자

박 의 경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현대사회의 변화

뉴밀레니엄이라는 말은 이제 진부한 말이 되어 버렸다.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 2000년인가 2001년인가라는 논쟁도 이미 시간적으로 넘어섰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기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 같다. 혼란, 혼란 하면서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직접 규정하는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 하지 않았던가. 2019년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신있게 피력하고, 다양한 모임과 집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당당하게 요청하는 시기가 되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자신없어 하던 시민이 이제 참여민주주의를 거쳐 직접민주주의적 요구까지 하게 된 것이다.

보통 우리는 문명의 시기를 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한다. 현재까지도 우리 삶의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은 근대의 산물이다.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그렇고, 만민평등사상에 근거한 의무교육과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각종 시험제도와 채용제도, 기계가 발명되고 대규모 생산으로 부의 대량 축적과 이동이 가능해진 산업근대화등 이 사회의 근저를 형성하는 모든 제도의 기반에 르네상스를 거쳐 계몽사상으로 자리잡아 온 근대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를 10-13세기로 보고, 계몽사상의 활동 시기를 14-5세기로 본다면 줄잡아서 한 4/5백년간 근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시대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를 사회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 변혁기(paradigm-shift)라고 한다. 산업근대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물리적

힘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회에서 지적 능력이 다양하게 인정되는 시대로 움직이면서, 투쟁과 경쟁 일변도의 사회에서 공존과 화합으로, 수직적 위계질서사회에서 수평적 관계사회로, 개발 우선 전략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하는 시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경영원칙도 대기업에 의한 단일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획일성을 넘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로 진행한다. 규모의 경제로 대형화만 추구하던 한국의 재벌이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의 움직임과 무관할 수 없다. 수년전 갑자기 다가와 아직도 우리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는 IMF라는 기억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치의 변화

큰 것 → 작은 것 (예: 지방자치의 등장)

강한 것 → 부드러운 것

이성 → 감정 (EQ와 정서교육의 등장)

동질성과 획일성 → 이질성과 독특성 ('튀다')

대원칙 → 일상적인 것 (개성 중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

(공사 구분이 없어진다.)

2)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화 시대 → 정보화 시대 (전통 제조업의 쇠퇴, 정보산업의 증가)

물리적 힘 중시 → 다양한 지적 능력의 필요성 (다양한 가치의 필요)

투쟁과 정복 → 공존, 협상과 나눔

개발 → 보존 (인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

무조건적 소유 → 선택적 소유 또는 공유

남성성 → 여성성

만드는 것 → 유지하는 것

2 한국사회의 특징과 변화

한국은 19세기말 국제사회의 자의반, 타의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였으나, 주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 시기는 2차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45년 해방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그 시기를 같이한다.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현대사회의 변화라는 소용돌이 내에 존재하면서도 상당히 복합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근대화 시대를 넘어섰으나, 제도적으로는 전근대 사회의 특징인 가부장 사회의 속성이 사회 각 분야의 인간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밀실정치, 밀실로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직접민주정이라는 역사적, 사상적 경험과 축적 없이 대의민주주의가 2차대전이후 식민국가 일본의 몰락과 동시에 한국에 직수입되었다. 전통의 권위와 위계질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의민주주의는 혈통과 세습이라는 방법을 선거로 변형시킨 채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로 변형되는 길 이외의 대안을 한국사회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고 이해하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민주주의의 당위성이 있고, 시민(특히, 여성)의 정치참여가 운위되는 이유가 있다.

과거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산업사회의 리더십은 언제나 권위적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요구해 왔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식의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마인드가 지도자의 가치로 인정받아 왔다. 실제로 최근에 영화 “친구”의 흥행 성공은 아직도 잔존하는 이에 대한 선망과 향수에 기인하는 바 크다. 우리 사회의 폭력성에 대한 흥미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사회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이러한 리더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 획일 사회에서 다원사회로 변형되면서, 어떠한 규정된 리더십의 유형도 없이, 그야말로 다양한 리더의 양태가 존재한다. 대체로 정보사회의 리더십은 ‘기러기 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기러기들은 한 명백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가 계속 바뀌어 간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앞서가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할 만 하다. 여기에 또 다시 힘이 없는 듯이 보이는 시민의 가능성을 본다. 언제나 1등만 중요시되던 위계사회에서 2등 이하가 리더라는 것이 쉽게 인지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

하고 일반 시민이 사회를 지켜내는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3. 시민의식의 성숙과 참여의 필요성

근대역사에서 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미미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논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산업화시대에는 거대한 사회적 동력을 필요로 하여, 일개 시민의 힘이 사회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거대한 사회적 동력이 필요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손과 발은 바로 그 미미한 힘을 가진 일개 시민이다. 시민 하나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근대화를 당시의 대통령이나 지도층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의 근대화는 당시 15시간 이상을 일했던, 구로 공단의 10대 여공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의 작은 힘이 모여 달성된 것이다. 그 공적을 당시의 몇몇 인사에게 돌리려는 시도는 역사를 호도 하는 일이다.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은 것이지, 절대로 일필휘지 선장 하는 어느 한 영웅의 작품이 아니다. 모자이크란 수없이 많은 조각이 모여 커다란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힘이 바로 여기에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바로 내 자리에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갑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는 정치가가 될 필요도 없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이 사회의 한 부분이고 사회의 구성요소이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주위로 손만 뻗치면 될 일이다. 반듯이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바깥으로 뻗치면 옆 사람에게 닿는다. 바로 이것이 참여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작은 힘으로 이루는 큰 것을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본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영화의 주인공이 탈출하기 위하여 구멍 파는 도구를 보자. 조그만 돌 다듬는 도끼로 파는데 20년이 걸린다. 하루에 얼마나 팔 수 있었을까? 그러나 결과는 큰 것이었다.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

것 중에서 필자가 발견한 것이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감옥의 도서관에서 일하게 된다. 말이 도서관이지 그냥 창고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변화를 시도한다.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1주일에 2번씩 보낸다. 편지 쓰는 일은 힘없는 일개 죄수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3-4년을 지속한 끝에 결국은 도서관이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교도소 안에 만들어진다. 작은 힘의 승리라고나 할까.

우리 시민들이 이 죄수보다는 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 시민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2000년 4월 총선연대의 활동(비록,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남기기는 하였지만)과 2016년 하반기를 장식했던 수많은 촛불, 2019년 현재에도 모두의 가슴 속에 피어있는 촛불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도 답답하게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시원함이라도 느낀 사람이 있다면 모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시원함이란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민주사회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한 환기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를 실제로 밑바닥에서부터 지키고 움직여 왔던 것이 바로 나의 힘이라는 인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지키는 것이 힘이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왔다면, 이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이러한 민주시민을 민주시민으로 살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지난 몇주간 볼 수 있었던 대규모의 집회는 기술발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이제 공사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즉, 나의 개인생활이 공공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어떤 사회적 사명감이 있어야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특히 지방자치의 시기에 이는 바로 나의 당면과제이기도 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나와 사회의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명백히 드러난다.

4. 여성이 참여해야 정치가 산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상태를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넘어가는 시기로 규정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여성인력의 개발이다. 산업화의 마지막에 서서 거의 모든 것의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여성이야말로 아직 미개발인 무진장의 자원이다. 뒤집어 말하면, 여성인력의 개발이 없으면, 사회 인력의 절반이 미개발 상태이므로, 그 국가의 경쟁력은 이미 계산이 나온 셈이다. 한마디로 여성 인력의 개발이 없이는 중진국 이상을 바라보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하다.

유엔개발계획의 통계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에서 한국은 상위에 속하는 15위권 이내이나, 성별권한척도에서는 68위에서 83위위라는 불균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개발지수 30위권 이내의 국가의 의회 여성비율이 평균 25%, 세계 여성의원 비율이 평균 20%와 비교하여, 한국의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17% (16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5.9%, 17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을 실시한 결과 13%, 19대 15%)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현상은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경제력에서의 여성권한 비율과 정치력에서의 여성비율의 격차는 종국적으로 균등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 여성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논리 중의 하나이다.

현재의 정치가 부패의 연속이고, 국회가 싸움장으로 되고 마는 이유의 근저에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본다면 역지일까?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그 반증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필자는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 길리간의 아동심리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길리간은 여아와 남아 집단의 놀이를 분석하면서, 특징적인 양상을 추출해 낸다. 여아건 남아건 놀다가 다투게 된다. 이 다툼을 다루고 그 이후의 양상이 여아와 남아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길리간은 주목한다. 남아는 놀이를 하다가 다툼 경우, 그 다툼으로 끝장을 낸다. 놀이에서 다툼의 승부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간다. 여아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 놀이를 하다 다투게 되면, 다툼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놀이라는 대안이 제시된다. 대안과 타협의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를 길리간은 이렇게 분석한다. 남아 집단의 경우 놀이의 목적이 다툼의 현장에서 변경되어 버린다. 결국 대화와 타협이나 대안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승부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치를 달리기나 높이뛰기 경주가 아니라, 삶의 장이라고 할 때, 앞에서 언급한 여아의 목적에 충실함이 보다 가치 있게 느껴진다. 정치에 승부욕이 앞서다 보니 누가 당권을 장악하고, 대권을 잡느냐, 누가 당선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생명을 걸게된다. 정치의 핵심이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성원리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에 정치를 살리기 위하여 여성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화시대를 지나면서 여성은 이에 적당하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 즉, 산업사회에 맞지 않게 여성은 일단 물리적 힘이 약하고, 비조직적이고, 비권력적이며, 산업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진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지사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다. 산업화 시대의 단점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기에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그 누가 알았으리... 즉,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신선하다. 비권력적이라 민주적이다. 비투쟁적이라 협조적이다. 원칙에 충실하니 법치정신에 잘맞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여성이 오히려 정치를 살리고, 정치의 주체가 되기에 보다 적절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현실 정치 속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여성이 오히려 더 권력적이고, 더 투쟁적인 경우도 있고, 더 탈법적인 사례도 다반사인 현실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참여만으로 정치, 나아가서 사회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에,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성향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살리기 위해 정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인간이고, 그 환경을 살리는 것도 인간이다. 여기에 여성 참여의 필요성이 또한 존재한다. 지금까지 끼어들기를 통해서 여성의 비율을 늘려왔다면, 이제 그 끼어든 여성들이 그 판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은 양적 증가라는 것은 물리학의 기본 원칙이다. 물이 차면 넘치고, 진자운동에서 균형이 어긋나 흔들리면 왕복운동을 거듭하면서 정지하려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17%라는 수치에서 보여주듯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 소수자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위한 임계수치는 30%이다. 30%라는 수치는 집권자들이 정책결정시에 그들이 소리를 경청하는 참여의 비율이다. 대한민국의 여성계는 오래전부터 30%를 목표수치로 제시하여 왔고, 최근에는 남녀 동수정치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30% 목표를 제시한지 50여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7%라면, 50% 달성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30%를 목표치로 보기에 여성은 그리 소수자가 아니다. 시작은 어려워도 한번 시작된 변화는 자체의 힘으로 굴러가게 되어있다. 당선자 기준으로 각 단일 정당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 20석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여성이 정책결정분야에서 가지는 영향력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여성이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정치참여 수준의 증가는 다른 분야의 여성인력을 견인할 것이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현재 세계에서 10위권 전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 격차 지수등을 비롯한 성차별 현황은 100위권을 밑돌고 있다. 현재 여성들의 요구는 늘어난 상태에서 사회의 수용여력이 이에 부응하면서 맞추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일종의 애로(隘路)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가 수용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당장 필요한 수만큼의 여성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여성 인력은 미래를 대비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미래에 곧장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준비된 인력이 곧 그 사회의 미래라고 할 때, 이제 여성이 그 준비 작업으로 들어가야 한다. 준비를 하는데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란 곧 적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참여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는 사회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정치는 살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살림의 선수들인 여성이 거기에 거부감 없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정치가 각 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각 가정의 운영자인 여성이 정

치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던 만큼이나, 여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진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참여해야 정치가 산다.

5. 정치를 살리는 여성의 조건과 가능성

21세기에 초입에서부터 여성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면서, 여성의 리더십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산업사회를 통하여 남성자원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이제 사회에 남은 자원은 여성뿐이다. 따라서 여성능력의 개발과 활용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리더십의 이해와 개발은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은 자명하다. 평등한 교육에의 기회라는 기본 조건이 산업사회를 통해 달성되어 이제 여성의 자질은 남성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한국 사회도 이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어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하여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과 1999년 발효된 남녀차별금지법, 2001년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등을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제반 지원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2005년에는 여성계의 숙원인 호주제 폐지도 이루어졌다.

21세기의 정치는 권력투쟁의 정치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 생활의 정치로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것임이 이미 드러나 상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도 확대될 것이다. 이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리더로서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해진다. 근대까지 적용되었던 공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이제 여성이 공적 영역에 자유로이 진입하게 되면서 여성의 리더십이 사회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남녀평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신념과 남녀 공히 제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사고에서도 이는 자명한 귀결이다.

현재까지의 남성중심적 정치 개념은 정치를 권력을 둘러싼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지배와 피지배, 갈등과 경쟁을 강조하는 산업 사회적 속성을 보여왔다. 여기에서 권력은 폭력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의 탁월한 여성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는 전체주의에 관한 탁월한 분석을 통하여 권력은 정치의 속성이 아니며 권력에 근거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란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하게 하며, 여기서의 정치 지도자는 권력과 지배가 아니라 캐롤 길리간(Carol Gilligan)적 표현인 돌봄이나 보살핌(care)이라는 공존적 리더십을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권력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게 된다. 권력이 과도하게 남성중심성으로 움직이면서 여성성이 배제된 결과 왜곡된 것이 경쟁과 파괴, 심지어는 폭력의 수단화 현상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 세계의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된 민주주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달성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문제는 남성적인 것이나 여성적인 것의 선택이 아니라 균형의 훼손에 있는 것이다. 남성적 특징의 하나인 진취성과 공격성이 과도하게 추진된 결과 우리 사회는 과도한 공격성과 경쟁성으로 힘없는 소수집단은 집단적으로 억압하는 공급자 중심사회를 유지하여 왔다. 수치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실제적 복지면에서 후진적임은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하다. 여성유권자의 증대와 공존하는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기도 한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환경의 대안 없는 파괴로 이제 삶의 질이 파괴되고 있음은 도처에서 드러난다.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자연의 정화기능이 상실되고, 삼림이 택지로 변하면서 홍수나 가뭄등 자연재해의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교통문제 해결을 이유로 강변에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산을 뚫어 물과 산의 정화기능이 상실되었다. 구조 조정 없는 무한한 경제성장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생산성 증가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생산의 증대와 함께 윤리의식없는 소비의 증대도 급속히 이루어져 인간이 양산하는 쓰레기의 문제는 이제 더러움이라는 감정을 지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에도 무한 경쟁의 논리가 들어와 집단간의 패거리 정치문화가 자리잡고 결국은 권력간의 싸움으로 움직여 정치의 본질인 타협과 협상은 사라진 미덕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남성성의 불균형적 전개에 있는 것이다.

이제 21세기 정치의 목표는 균형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에 균형이

회복되면, 성장위주, 경쟁 위주의 경쟁에서 생존을 중시하고 보존을 고려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정치로 전화될 것이다. 정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의 경제 계획도 이에 부응하게 되고, 환경, 교육 등 다른 분야도 경쟁이나 투쟁보다는 화합과 공생을 유지,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에는 돌봄과 보살핌의 특성을 지니고 공생을 목표로 설정하는 여성성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다. IQ에 대비한 EQ의 등장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국회의원이 제대로 활동하게 되면서, 교육과 보건, 사회문화적 사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은 국회의 기록에서 많이 드러난다.

여성성이나 남성성 어느 하나도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자명할진대, 결론적으로 현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양성성을 고루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바람직한 여성리더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소속당원의 노력과 협조를 유도하고 조직화하며, 대외적으로는 유권자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주고, 정치적 지지를 유도하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여기서 여성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둘째, 추진력과 인내, 집념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지식에 근거한 명확한 정치철학과 판단력 및 결단력이 요구된다. 넷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신의 비전을 전달하고 대내적으로는 당원의지지, 대외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기준으로 요구되는 남성적 리더십의 요건과 같은 것이면, 여기에 다음 두 가지가 여성리더의 요건으로서 추가되어야 한다. 즉, 남성리더에게 부족한 모성에 근거한 보살핌과 세심함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민주성으로 무장하고 삶의 질의 정치,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즉, 부정적, 소극적 여성상을 극복하고 긍정적, 적극적 여성상을 창조하는 진취적 여성이 바로 21세기 한국정치를 이끌 수 있는 여성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인 것이다.

나아가 지도자적 자질이 곧바로 지도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일반 시민들의 선택으로 등장하게되는만큼 유권자 의식의 계몽, 민주주의 문화의 정착, 남성정치지도자의 진보적 여성 의식,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지도자의 비율, 평화와 안정, 복지국가의 실현 등

제반 환경 등도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국회의원등에서 보이는 역할모델의 설정을 통한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정치문화의 개선, 여성단체의 세력화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신장, 선거에서의 할당제나 비례대표제, 공직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등 법적, 제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이 여성에 대한 지원을 증강하여 여성후보를 발굴, 육성하는 노력도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상층부에서의 여성지도자의 역할모델로서의 성장과 함께, 사회기저층을 형성하는 민간부문에서의 시민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정당의 지원 확대 등이 모두 종합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대하고, 균형적 삶의 정치로 우리의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제도방안

윤 명 희

전라남도의회의원

성평등은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사회 아직 성평등은 법과 제도, 문서 위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잠자고 있는 권리를 깨워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 받는 인권사회, 즉 성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할 때입니다.

세계인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우리사회에 목소리를 내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들은 스위스보다 빠르게 참정권을 요구했으며 대한민국이 OECD 10위 국가로 올라온 데는 어머니들의 땀과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중국의 기업 알리바바의 임원 중 40%가 여성입니다. 이제는 여성의 희생을 공생으로, 헌신을 혁신으로 바꿔서 여성들이 당당하게 ‘메인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격차는 15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두배 가까이 되고, 또 여성의 고용률도 10명 중 절반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가정에 머무는 상태이며, 여성임원 비율도 너무 적습니다.

작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한 남녀 성별임금격차는 37.1%이며 비혼 남성과 비혼 여성의 임금격차는 13.54%이며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임금격차는 41.5%에 달하며,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별임금격차가 커졌는데 고졸 이하의 성별임금격차는 38.3%, 초대졸은 32.3%, 대졸은 31.7%, 대학원졸은 27.9%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진급에 있어 남성보다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일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급’을 묻는 질문에서도 부장급 이상을 기대하는 비중은 남성이 68.5%, 여성의 경우 42.2%수준입니다.

성별 기본급 격차는 16.2%이었으며, 성별 상여금 격차는 17.3%,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친 성별임금격차는 16.6%이며, 유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6.0%, 여성은 84.6%로 나타나 자녀돌봄은 대체로 여성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의 성평등 문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53만 명의 노동자 중 여성은 20.1%에 그쳤다. 50개의 기업 중 40개 기업의 여성등기임원 수가 0명이었으며 나머지 10개의 기업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성별 임금격차라는 결과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게 나타나고 전남의 임금성비는 51.8%로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50.0%를 약간 넘는 상황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는 여성노동정책을 통해 임금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평등 노동정책은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현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삶과 밀착된 지역차원의 활동은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더 큰 역할을 해 낼 수도 있습니다.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근 국제사회 흐름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나아가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7월에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전남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및 양성평등 사회화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평등 전남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의 기본 방향을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협력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여성노동정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실사구시의 맞춤형 정책과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 승 옥
구례군의회의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실사구시의 맞춤형 정책과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승옥 / 구례군의회의원

1. 토론방향

▶다각적이인 접근 및 실사구시의 맞춤형 정책 必

- ◆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화의 성지이자 정치의 심장부인 전남 이곳에서 우리지역의 여성의 삶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전남 여성의원님들과 함께 전망을 해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고 시사 하는 바가 큼.
- ◆ 특히, 조국장관 사태로 인해 청소년과 여성층에서 많은 실망감과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에 대해 잠시나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도 국민들께 공개사과를 함으로써 상당히 호전돼서 다행이지만, 아직 여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내년 총선에서 2030청년층과 여성층의 지지를 받아야 총선의 압도적 승리 가능
 - 제안된 의견·수렴된 의제는 중앙당에 건의,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 안경주 전남 여성 가족재단 원장님과 박의경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의 주제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정합성을 갖는 주제와 내용이었다고 생각함.
- ◆ 전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높은 실사구시의 맞춤형 정책의 개발과 다양한 계층과 이슈 등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튼튼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2. 여성의 삶의 평가

▶ 다른 시동에 비해 열악, 긍정부정적인 지표로 대별분석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전남 여성의 삶에 대한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전남의 여성의 삶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낮고, 또한 전남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전남(2019) 성인지 예산 총 138개 사업의 442,858백만원(4조428억5천8백만원)(△19.94%)

◆ 여성 삶의 질에 대해 논의할 때 어느 하나의 지표보다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고 성장이나 발전에 상향 추세인 긍정적인 지표와 이에 反한 부정적인 지표로 대별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

퇴보적인 부정지표

① 전남 여성의 정치참여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전무하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도 전무,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은 1%대, 전남은 기초자치단체장 단 명도 없음.

☞ 인용 :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전남여성지방의원협의회 워크숍 자료
(지방여성정치인의 역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위원장 이해자)

② 전남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5년 32.6%에서 2016년 33.6%로 1.0% 증가

※ 2018년 전남도의원 여성 후보 16명중 지역구 당선자 3명, 비례대표 5명

③ 전체여성 공무원 수에 비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

※ 구례군의 경우 여성 사무관이 2명밖에 되지 않음.

④ 경력단절 여성비율이 매년 증가(30~34세 대의 여성=2015년 34.6%에서 2017년 47.3%로 증가)하고 그 이유도 결혼준비, 임신 및 출산, 유아가 큼.

상향적인 긍정지표

① 사업체 중 47%가 여성대표자(CEO)인 데다 고용률은 늘고 실업률은 줄고 있음.

※ 2018년 여성 고용률은 53.8%로 전년(53.6%) 대비 0.2%p 증가/ 여성 실업률은 2.5%로 2017년(2.9%) 대비 0.4%p 감소

② 전남지역 여성 기대수명은 85.6년으로 2005년(81.6년)에 비해 4.0년 증가했으며, 향후 지속해서 증가해 2045년 89.6년으로 전망

③ 또한, 여성의 삶의 질의 변수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은 50.8%로

2016년보다 6.1%p 감소, 사회 안전에 대한 비율은 지난해 전남지역 13세 이상 여성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는 비율이 30.2%로 10년 전(51.1%)보다 하락했으나, 남성(28.8%)에 비해 1.4%p 높았음.

3. 여성의 삶의 전망

▶ 여성권익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가

성평등의 목표

- ☑ 성차별 없는 재정운영 -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 정책추진기반 강화
- ☑ 여성권익보장 및 안전한 사회생활지원 - 가족복지증진 도모,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 ☑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및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압박 증가”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확대 지원, 여성 폭력방지

- ◆ 전남은 초고령화 시대(65세 20%, 전남은 22%)에 접어들었으며, 전남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여성 노년층이 많아질 것임.
- ◆ 전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경력단절 비율도 높아질 것임.
- ◆ 전남 여성의 정치참여도는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더 호전될 것임.
- ◆ 전남 여성의 사회안전도에 대한 지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Ⅴ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통계청 자료)

직업을 가진 것이 좋다(90.3%), 가정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6.1%)

[가정 일에 관계 없어서 57%,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 20.4%, 자녀가 성장한 후 15.2%, 첫 자녀 출산 전까지 3.4%, 결혼 전까지 4.0%]

Ⅴ “女 힘든 일” 한 마디에 ... 점수 바꾼 면접관, 1등 떨어뜨렸다.

(중앙일보, 2019. 11. 10. / 2016년 서울교통공사의 모터카 철도장비 운전분야 신입사원 면접날)

4. 여성의 삶 향상 제언

▶ 국가자치단체 투트랙, 분야별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노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수준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지만, 이에 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을 비롯한 성비적, 정책적, 입법적, 정치적,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 등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국가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해결 필요

◇ (사회·경제적 측면) 임신육아 등 국가적 지원 확대

여성의 삶의 질의 문제 중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사안이 임신육아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임신 육아 등 국가적 지원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동돌봄 시간 확대로 일과 가정의 실질적인 양립 기반조성

※ 북유럽의 경우 질적 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 75%가 일과 가정 양립

◇ (성비적 측면) 여성관리자 지속 확대 정책(할당제 권고, 도입 등)

전남도와 시군의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여성공무원 비율을 감안하여 더 높이도록 자치단체에 강력권고하고 맞춤형 여성리더 육성·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 (정책적 측면) 지역 맞춤형 여성, 가족 및 양성평 등 정책수립·시행

전남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 가족 및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 가족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성별통계자료 종합 DB구축 중요

◇ (입법적 측면)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실효적 법률과 관련 조례 등 입법적 뒷받침

국가적 차원의 여성권익향상과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추가적 입법조치와 더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차별 개선과 실효적인 양성평등 증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입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강희정 의원 대표발의)

☞ 「구례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14.12.20 이승옥 의원 대표발의)

◇ (정치적 측면) 제도권 내 여성정치인 육성 제도 획기적 도입 및 추진

제도권 정치인의 경우 이슈를 수렴하고 입법적으로 정책화하는데 촉진자 역할을 하므로, 여성권익 향상과 여성 삶의 향상을 위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함. 정치선진국이자 복지선진국인 북유럽의 경우 여성우대정책은 남녀 40~50% 등 아주 획기적인 점을 벤치마킹 필요

① 국회의원 공천 지역구 30% 의무화

②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공천 단계별 30% 의무화 (1단계 20%, 2단계 30%),

③ 광역 및 기초의원은 50% 의무화

☞ 민주당전남여성의원협의회와 전국여성의원협의회 주도로 정책적 건의 촉구

※ 북유럽 여성정계 진출비율 ▶ 1970년대 20%까지, 1980년대, 1990년대 들어 30%,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40%까지 확대, 스웨덴은 특히 여성 비율이 45%에 이름.

※ 아프리카 르완다는 2013년 하원선거에서 61.3%(80석 중 49석)로 전 세계 1위

◆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도와 시군단위에 여성의 삶과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는 「베스트 여성의 삶」, 「더 나은 여성의 삶」과 같은 정책 포럼을 결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과 이슈화를 통해 실효적 정책대안 제시 필요

5. 토론을 미치면서

▶ 교육으로 여성 인식 전환 및 협업, 맞춤형 정책 개발·추진

“실질적인 여성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길은 보통 서거권을 획득하는 과정처럼 투쟁의 역사였다. 이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여성권익 향상과 양성 평등구현은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토대와 환경을 마련하는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

◆ 사회전반에서 걸쳐 퍼져있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각종 여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담보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어함.

◆ 특히, 선거전에 쏟아지는 선심성 여성정책 공약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사구시의 맞춤형 여성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협업하는 것이 중요함.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기억하자!

문을 열고 나서라 - 우리는 여성이다 -

조 영 미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문을 열고 나서라〉 -우리는 여성이다-

조 영 미 /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확실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 때 유행처럼 번지던 ‘남녀평등’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 이르러 ‘젠더’라는 문제에 귀결되면서 남녀 모두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하는 사회 일반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일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는 정책적 개념으로 더 자주 이용되곤 한다. 하지만, 전 사회적 구조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수많은 정책 속에 여성인권이 포함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며, 또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여성인권성장을 위한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여성인권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 필요

농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위원장으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특히 여성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룬다.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책상위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농촌에서 살려면 3W가 필요하다고 흔히 이야기한다. 이는 Wife(아내), Water(물), Work(일) 이다. 첫 번째가 아내라는 점에서 이것이 남성농업인

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예전부터 흔히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농촌사회가 얼마나 남성 위주의 사회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구전된 이야기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제도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전) 젠더&공동체 대표, (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오미란 팀장의 ‘여성농업인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나?’라는 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은 농업노동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소유할 권리보다는 노동할 권리만을 가진 것이냐며 지적하였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 역시 70세 미만만 해당되며, 심지어 농가공동경영주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농업인이라면 나이제한은 왜 있으며 농가대표가 되는 것이 왜 동의가 필요한 걸까? 여성농민들의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정책에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실현이 더 명확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농촌 거주 여성 인권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결혼, 출산, 다문화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귀하다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분명히 농촌에 청년 성비가 남3:여1 이라는 불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어 농촌총각결혼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문화 가족의 증대와 농촌지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쏟아지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많은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도시에 적합한 것들로, 현실적으로 지방에 실효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기관의 깊이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문제등과 병행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문화가정이 이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촌 여성의 인권문제는 이주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빼놓고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 지속가능성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핵심적인 과제임을 명심하여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3. 노령사회에 있어서 여성 고령자에 대한 특별 정책 필요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문제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에 속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복지와 인권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평생 동안 농사를 업으로 생산활동을 해왔던 농촌 사회에서의 노령화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생산활동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는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농촌 지역의 늘어나는 결혼 이주여성과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식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여성과의 매칭을 주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친정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돕는 것과 더불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노년기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그 지역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자치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우수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더욱 고민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통념을 고치고자 새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다. 어떤 차별보다 긴 남녀불평등의 역사 속 많은 세월 동안 세뇌되어 있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돌리며 외면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여성들은 많은 것들을 꾸준히 이루었다. 인구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며 나머지 절반을 잉태하고 보육하고 키워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지금의 제도가 불평등하며 기존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여성이 아닌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유감이지만 아무도 자신의 몫을 찾아주지 않기에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더 나아가야 한다.

전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박 옥 임

순천대 명예교수, 사회학 교수

전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박 옥 임(순천대 명예교수, 사회학)

2019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와 다가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남지역의 여성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으로 바라는 정책적 요구가 무엇인지 방향과 대안을 찾아보자는 시도는 아주 뜻깊은 토론회이다.

1. 인구 재양과 여성 자원 활용

그렇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10%를 넘나드는 고성장 시대였다면 지금은 2%를 넘을까 말까 하는 저성장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밝힌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는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역 피라미드’로 인구 재양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일 예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9.8%인데 반해,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로 1세기도 채 지나지 않는 시기에 아래와 위가 완전히 뒤바뀐 역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어디 저성장과 인구 감소만 문제인가. 계층이나 세대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이념과 성별 그리고 지역갈등도 고질적인 잔재로 남아있으며, 일자리 문제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까지도 우리의 삶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우리 여성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고질적인 차별구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에 바로 개입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난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말로만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었던가.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해야만 한다.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핵심 과제이다.

1870년 영국에서 최초로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한 소파이어 잭스 블레이크는 해부학 강의에 들어오지 말라는 남학생들의 완강한 반대를 이겨냈다. “여학생에게도 남학생과 똑같이 의사 자격시험을 볼 기회를 달라. 그리고 합격하면 의사자격증도 달라. 여성이 끝까지 의사로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여성들과 사회가 판단하게 하시오!”라고 주장하였다. 선각자들의 저항과 노력에 의해 여성 의사 양성의 두터운 벽이 무너지고 여성의과대학과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병원도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의사 교육기관으로는 1938년도 전남 순천의 우석 김종익 선생이 세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있었으며 그 후 우석대학교로 개편되었다가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오고 있다. 전남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2. 여성 빈곤의 구조적인 문제

여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5여 년 전에 주장한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홀대받고 사장되고 있는 자원이 바로 여성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고 발표하였다. 조금 세분하면 고용률도 남성 79%에 비해 여성 59%로 20%포인트 차이가 있으며 임금 격차도 37%에 달하고 있다. 창피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런데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교육수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없는 대등한 수준이다.

1983년 1월 한국통신공사에서 정년퇴직을 요구받은 김영희씨는 남성 직원은 정년이 58세인데 여성은 15년이나 빨리 퇴직을 하는 가에 대한 정년 무효 확인 소송의 법정투쟁에서 승소하였다. 무려 6년 동안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얻어낸 쾌거였다. 이후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되어 그나마 오늘에 이르고 있다.

흔히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1970년대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한 것으로 충분한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차단되는 현상)이 있고 거기에는 엄청난 성차별이 구조화되어있다는 것이다.

최근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이 300만 관객을 넘고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현상은 바로 여성의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유리천장지수의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처한 삶의 이야기가 남녀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엄청난 공감을 불러온 것입니다. 왜 공감했을까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고 겪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차별과 육아, 가족 간의 서열 문제로 인한 경력단절 등에 관한 애환과 설움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빈곤으로 인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최근에 발생한 탈북한 새터민 모자의 죽음은 성별화된 ‘여성 빈곤화’의 단적인 현실의 반영이다. 여성들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은 노소를 떠나 모든 연령대에 걸쳐있다. 아직도 남성이 생계의 주부양자 중심인 성별분업 체계의 강화나 심지어 사회복지제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돌봄 노동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여성은 왜 적게 버는가(미켈란 발터라, 2005)’에 대한 의문과 그 해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여성의 탈빈곤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3. 국회의원 공천 남·녀 동수 요구

우리는 흔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냉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이 겪지 않는 차별과 억압은 물론이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일 예로 국가의 중요한 기관의 장이나 주변의 여러 행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데 여성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남성 중심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요구사항과 잘못된 차별이나 누적된 여러 모순들을 바꾸려는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 대표자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이므로 여성 대표자도 절반이어야 함은 당연한 주장이고 또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이 140일 정도 남아있다. 역대 국민의 대표인 여성 국회의원의 진출 숫자를 보면 제헌국회에서 여성이 1명, 4대에 3명, 8대에 5명, 9대 17명, 17대에 와서 할당제로 3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여세로 18대 41명, 19대 49명, 20대인 현재 51명이다. 이 51명이 전체 국회의원 중 17%에 해당되고 있으니 최소 하한선인 30%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총선에 일단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30%를 공천해야만 한다. 그래야 각 정당의 비례에서도 남·녀 동수제도를 포함하여 여성들이 요구하는 목표인 차후 50% 여성 공천 목표달성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40%를 넘는 국회의원은 2명의 여성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생활에 밀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변화시키는데 여성국회의원 공천이 반드시 절반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혹자는 절반은 과도한 요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분이 확고하면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여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이다.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구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1920년대 선각자 서재필 박사는 전 국민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지금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실현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 행사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부녀연합회 청사 벽에 5가지 주장(motto)이 양각되어 있었다. 자존(自尊), 자강(自強), 자신(自信), 자립(自立), 자주(自主)이다.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종속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삶의 주인공으로 생활의 주체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핵심은 여성이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 하느냐이다.

블루 이코노미 시대, 경제주체로서 전남 여성의 역할

김 영 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블루 이코노미 시대, 경제주체로서 전남 여성의 역할

김 영 미 /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전남의 산업구도는 '블루 이코노미'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혁신산업으로 재편 중
 - 블루 이코노미: 섬·해양·하늘·바람 등 블루자원(Blue Resource)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혁신적 미래 신산업 전략
- 6대 프로젝트: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 블루 농수산물, 블루시티





- 전남 여성의 경제참여 수준은 높지만 임금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을 극복 필요
 -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성비를 토대로 살펴본 바, 전남도 내 여성의 경제산업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다소 낮다는 결론

<표 1>경제활동 참가율 성비/임금성비(2018)

행정구역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임금성비	행정구역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임금성비
목포시	71.54	65.41	장흥군	86.02	57.18
여수시	63.22	46.99	강진군	83.87	61.70
순천시	70.28	55.42	해남군	89.71	67.60
나주시	79.21	65.26	영암군	69.93	57.63
광양시	62.56	44.92	무안군	84.37	64.12
담양군	91.47	67.92	함평군	88.17	63.81
곡성군	80.04	66.33	영광군	78.09	59.76
구례군	89.73	59.59	장성군	81.17	70.28
고흥군	88.22	65.75	완도군	86.92	57.77
보성군	85.17	58.67	진도군	88.84	60.19
화순군	74.58	56.99	신안군	86.60	54.60
전체	74.12	55.70			

출처: 지역별고용조사(2018) 상반기 자료

- 특히 남녀 간 정규직 비율 격차와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모두 크게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
- 남성들은 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지만 여성은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아
여성이 질 낮은 일자리에 몰려 있음

<표 2>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및 격차

구분 행정구역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격차(%)	남성(%)	여성(%)	격차(%)
목포시	51.5	41.5	10.02	24.3	33.6	-9.30
여수시	58.0	34.7	23.36	19.4	32.0	-12.58
순천시	52.9	41.3	11.56	18.1	29.4	-11.28
나주시	43.5	41.3	2.22	18.7	24.1	-5.36
광양시	64.1	35.6	28.52	17.1	33.2	-16.14
담양군	32.1	33.0	-0.85	11.8	19.4	-7.59
곡성군	34.2	25.1	9.13	23.8	19.8	3.98
구례군	39.3	35.3	4.02	14.6	18.0	-3.42
고흥군	30.1	27.5	2.57	9.7	11.1	-1.39
보성군	29.3	21.9	7.40	13.9	14.6	-0.70
화순군	45.9	39.8	6.17	17.0	28.3	-11.35
장흥군	32.2	32.6	-0.37	10.3	12.8	-2.50
강진군	35.8	39.0	-3.17	11.8	16.9	-5.07
해남군	27.3	29.8	-2.50	15.6	15.7	-0.10
영암군	48.7	31.0	17.62	17.1	27.2	-10.13
무안군	45.8	36.3	9.46	16.3	22.7	-6.33
함평군	28.8	27.2	1.59	15.6	23.1	-7.57
영광군	42.6	33.8	8.88	2.6	19.8	-7.19
장성군	39.8	36.6	3.12	18.0	22.1	-4.15
완도군	27.8	21.6	6.26	11.8	18.7	-6.89
진도군	31.2	28.5	2.72	13.3	14.6	-1.30
신안군	22.5	12.3	10.29	8.3	11.0	-2.73
전체	47.0	35.3	11.71	17.5	25.6	-8.18

출처: 지역별고용조사(2018) 상반기 자료

○ 전남 여성의 경제활동이 질적·양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차원의 정책적 논의 및 정치적 노력 요구

정책적 논의

-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에 여성 일자리 창출의 정책 우선순위(교육·훈련, 취업연계 서비스, 창업지원, 보육 및 육아 종합지원 등)
- 22개 시군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여성경제인 지원 정책 수립

정치적 노력

- 전남 여성경제인들을 주축으로 중앙·지방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 마련
- 정당-여성경제인간 주기적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역할 정립

